

文대통령 “개헌안 3월에는 발의돼야”

신년 기자회견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지방정부, 지방분권 충분한 역량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분야 방안들은 오래 전부터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소 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라는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정치 부족부분, 지방정부가 배워”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

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지지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가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악플은 유권자 의사표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합치 방향과 영수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선 합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재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는 질문에 “저만큼 문자를 통한 비난과 악플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웃으면서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 징역형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계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희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 추병호(6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윤 전 행정관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김장자 회장 등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며 “김 회장과 이 사무총장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전 사장과 김경숙 전 학장, 추병호 전 국장 정매주 분장사씨에 대해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들로, 이를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민(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별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설치...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혁신성장추진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당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 활동을 담당한다.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 김태연 정책위 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포함한 김병관·박광문·이원욱·고용진·김병욱·김종민·박정·박경미·박찬대·위성근·황희 의원 등 원내 13명과 벤처기업 대표, 교수 등 원외 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위원은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원의 전문가는 ▲고학석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김도현 국민대 교수▲김봉진 우이현재단 대표▲김성준 남서울대 교수▲김우승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김지현 엔트리 교육연구소 대표▲류해필 한국창업멘토협회 회장▲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서법식 한국온실작물연구소장 ▲이신호 차의과대학 학과장▲이용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정성인 프리마어 파트너스 대표▲정우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정재호 포터스시스템 대표▲조종연 메타빌드 대표▲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 대표▲홍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이사장 등이다. /뉴스

“복합건축물 긴급안전점검·불법주차 대책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복합건축물 긴급안전점검과 불법주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사진)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제천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에 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진압 장비 도착 지연은 이제 화재사건의 단골메뉴가 됐다”며 “골든타임 결핍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과 도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제천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골든타임 등 대형 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출동 소방관들은 불법 주차된 차

들을 직접 옮긴 후에야 화재 건물에 진입했고 실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의 소방차들이 주변 불법주차 차량로 먼 거리를 우회하고 소방관들이 직접 차를 옮기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되며 이 사실이 입증됐다.

최 의원은 “불법 주차·정차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하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최명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규정 정비·강화해야”

불법주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국가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의 최우선이자 가장 기본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킴이다”며 “안전관리자의 교육강화 및 화재 취약업종 탈출기구 비치 그리고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 차원의 주차장 특별주차 금지구역 지정 등 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선구)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구분	금액
01. 후원금 사용내역	
01.1. 후원금 사용내역	51,370,679,216
02. 국내 재원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연 지식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